

순천만까지 확대 ...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 지정 추진



13일 박람회장을 찾은 인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목표 관람객 400만명을 돌파해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박람회장 사후 활용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순천만정원박람회장 사후 활용 어떻게...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목표 관람객 돌파와 순천을 대한민국 생태수도로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 평가를 받을 만하다.

하지만 6개월간의 대회 개최이후 박람회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과제로 남아 있다. 지난해 열린 여수세계박람회가 현 상태로 간다면 매년 200억원 안팎의 운영 적자를 낼 것이란 지적처럼 박람회는 통상 대회 이후 지방 재정을 썩먹는 '돈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천만정원박람회장이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사후 활용을 위한 냉정한 마스터플랜 마련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하는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초기 시 직영후 재단법인인 운영=순천만정원박람회장의 사후 활용 마스터플랜은 이미 나왔다. 순천시는 지난 7월 '정원박람회 사후 운영 및 연관산업 육성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고 마스터플랜을 공개했다. 순천시는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 맡긴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후 활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마스터플랜이 사실상의 사후 활용 골격이라고 볼 수 있다.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박람회장 운영은 초기에는 시가 직영형태로 맡다 최종적으로는 재단법인을 설립해 넘기기로 했다. 박람회

시설물 보수는 외주·동물원은 위탁·판매시설은 임대

정원 관련 정기박람회·축제·국제회의의 2년 단위 유치

일회성 작목인 초화류 줄이고 수목의 비중을 늘려야



장 명칭도 정원박람회장이 순천만과의 연계 속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순천만정원'으로 정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순천만정원을 국가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법률에는 국립수목원, 공립수목원, 학교수목원만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법률 개정을 통해 순천만정원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운영·관리 비용의 효율성과 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미화·시설물 유지보수·경비 등은 외주를 주고 동물원·정원문화체험관은 위탁운영, 음식물 시설·기념품 판매를 제외한 판매시설은 임대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런 경우 박람회장 수입은 연간 113억원

(입장료 98억원, 체험프로그램 수입 10억원 등), 운영비는 86억원(유지관리비 49억원, 운영 사업비 30억원 등)으로 지출보다는 수입이 많은 흑자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과 관련된 정기박람회와 축제, 국제회의 등을 유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순천만국제정원축제를 2015년부터 2년 단위로 4~5월중에 15일 이내로 개최하고 중간에 국내 정원축제를 개최할 것을 권했다. 기존 갈대축제를 박람회장으로 옮겨 열고 흑두루미 모니터링대회 등 국제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문화(정원)는 있으나 산업이 없는 공원으로 전락하는 것을 피하려면 정원문화산업 요소가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2015~17년 사이에 정원박물관과 정원산업지원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운영 흑자 쉽지 않다=정원박람회의 가장 큰 매력은 산업박람회와 달리 수목의 특

성상 시설이 자산으로 남고 해가 갈수록 가치를 더해간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이 점은 역으로 운영비를 가중시키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이 일회성 작목인 초화류 비중을 줄이고 수목 비중을 늘리라고 하는 점도 이 때문이다. 현재 순천만정원박람회장의 연간 조정 및 유지관리비는 15억원이다.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은 초화류 식재 구역을 관람객들의 주 동선을 따라 집중적으로 심고 계절 꽃을 혼합 파종해 비용을 줄이라고 지적했다. 또 비용절감을 위해 현재 74만주의 나무종 매년 10%를 순천의 기후에 맞는 수종으로 교체할 것을 권했다.

마스터플랜에는 박람회장 운영으로 연간 27억원 흑자를 예상했지만 지출 항목에 공무원 인건비 50억원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를 포함할 경우 운영비는 연간 136억원이 돼 오히려 23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보인다. 박람회장 운영을 위해서는 기간제와 일용직을 제외한 정규 공무원 인력만 83명이 필요하다.

전남발전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마스터플랜상으로는 흑자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운영하다보면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나올 수 있다"며 "운영 과정에서 유연한 대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원전 안전장치' 검증기관이 성적서 조작 의혹

산업기술시험원, 수소 폭발사실 누락 '적합' 바꿔 기재

민주당 우윤근 의원 제기 ... '검찰 수사 의뢰 검토'

일본 후쿠시마 사태와 같은 원전 폭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피동축매형 수소제거장치(PAR)의 성능 재시험 결과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5월 새한티이피 등 민간 검증기관의 시험성적서 위조 파문에 이어 이번에는 공공 검증기관까지 시험성적서 조작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에 따르면 한국기계연구원은 지난 7월말 한국 산업기술시험원의 용역을 받아 원전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참관 속에 PAR의 냉각제 상실사고(LOCA) 재시험을 시행했다.

문제는 시험설비에 수소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수소가 폭발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이에 기계연구원은 안전

사고를 우려해 수소 주입을 중단한 상태에서 나머지 시험을 진행한 뒤 보고서에 '부적합' 의견을 명시했다. 하지만, 산업기술시험원은 자체 보고서에 수소 폭발 사실을 누락하고 '적합', '허용기준 만족'으로 바꿔 기재했다.

산업기술시험원은 이후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정상적인 조건에서 시험을 진행했으며 PAR의 변형 또는 손상이 없었다'는 결론을 삽입한 보고서를 제출했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를 그대로 채택했다.

이에 우 의원은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시험 전 과정을 참관했다는 점을 고려, 산업기술시험원과 결탁해 조직적으로 시험 결과를 조작·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원전 최고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이 보고서를 근거

로 지난 8월 'PAR 재시험 결과 성능이 만족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하고 지난 10일 '원전 비리 근절'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도 이 부분은 빠뜨렸다.

피동축매형 수소제거장치(PAR)는 전제지번호로 원자로에 공급되는 전기가 끊겨 냉각기가 제 기능을 못하는 냉각제 상실사고(LOCA)가 발생할 경우 원자로 내부에서 대량으로 나오는 수소를 제거해 폭발사고를 막는 장치다. 2011년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국내 23개 원전 가운데 18개에 설치됐고 차례로 모든 원전에 설치될 예정이다.

우윤근 의원은 관계자는 "민간 검증기관의 시험성적서 위조 파문이 식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시험성적서 부실·조작 의혹이 불거졌다는 것은 결코 쉽게 넘겨서는 안 될 일"이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진실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재정난? 우린 몰라"... 의정비 21% 올린 광주서구의회

인상률 전국 최고 ... 남구·북구의회도 두자릿수 증액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난 가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광주지역 일부 기초

의회가 민선 5기 들어 의정비를 두 자릿수 인상한 것으로 나타나 자치단체

재정난은 뒷전인 채 자신들의 배만 채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기간 중 광주 서구의회의 의정비 증액률은 전국 광역·기초의회 중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기선(강원 원주 갑)이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지방의회 의정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 말 현재까지 지방의회의 의정비를 인상한 지자체는 105개에 달했고, 139개 지자체는 의정비를 인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광주지역 기초의회는 이 기간 동안 모두 의정비를 인상했으며, 특히 광주 서구의회는 21%를 증액해 전국 지방의회에서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이어 남구의회 12.5%, 북구의회 10.9%로 두자릿수의 증액률을 기록했다.

반면 광산구의회는 5.8%, 동구는 4.3% 증액했으며, 광주시의회는 4.7%를 인상했다.

한편, 지난 8월말 현재 지방의회 의정비는 광역의회의 경우 평균 5372만 원이고, 기초의회는 351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HITEJINRO

은땀에 퍼지는 강렬한 자극이 맛이 드러나

시원함의 끝

광고: 지나친 음주는 건강이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발생률을 높입니다

빛의만평 - 김종두

어랏!

태산이 되어 있더라